

與 “검찰 개혁 속도” … 한국당 “수사 계속”

조국장관 사퇴 여야 반응… ‘조국 정국’ 새 국면 돌입 민주, 법안 처리 압박… 한국당, 패트 수사 저지 투쟁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단락 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당장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됐다고 보고 검

찰 개혁의 본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정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날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지는 게 민주당 논리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이반된 중도층 민심을 끌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

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사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수사를 이른바 ‘조국 게이트’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남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여권 때리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등으로 국론 분열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향후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 공조’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장관 없는 법무부 국정감사

오늘 법사위 국감…김오수 차관 질의 답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조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통상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지만,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청와대의 사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다음 서열인 차관이 답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부처 국감에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환경부 국감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감에서는 교체된 김은경 당시 장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서 박찬규 차관이 대신 출석해 답변했다.

조 장관이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부분도 바뀔 공산이 커졌다. 당초 조 장관 일가에 관한 각종 의혹에 질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도 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퇴와 상관없이 조 장관을 불러 질의답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檢 “윤석열, 보고서에 있지만 허위내용”

검찰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알고 지냈다는 의혹이 검찰 과거사 진상기구의 보고서에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검찰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4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윤 총장이 과거 지인 임모씨의 소개로 윤씨를 알고 지냈으며, 윤씨의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윤씨의 진술이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담겼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검은 “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조사단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모 호텔에서 윤씨를 면담한 후 작성한 면담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동일하게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면담 내용대로 사실대로 기재됐는지를 윤씨에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조사단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면담보고서 내용처럼 말했다는 지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채 최종 보고서에 끼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윤씨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고, 윤씨마저 윤 총장을 안다고 말했던 것은 착오라고 해명하면서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민주 “패스트트랙, 검찰 개혁법 먼저 처리하자”

이인영 원내대표 공식 제안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2+2+2 회의 16일 개최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 처리를 제안하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조국 정국’의 초점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분리해서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된다”면서 “야당에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 처리를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다음달 27일 본회의 부의)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정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 개혁 법안이 이날 29일에 본회의로 넘어오는 만큼 검찰 개혁에 먼저 착수하지는 의미다.

제1야당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두번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들이 만나 “저희 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던 법안·검찰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차분히 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한다고 보고 그 이유

를 ‘조국 구하기’에서 찾고 있다. 여권의 검찰개혁을 ‘조국 방탄용’이라고 규정하고 19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개최,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대외 공세의 고삐를 풀 예정이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

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2+2+2(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를 1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지지율 35.3%…한국당 34.4%

리얼미터 조사…문 대통령 41.4% 취임후 최저

‘조국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0%포인트 하락한 35.3%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5월 2주차(34.3%)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저치였다. 특히 일간집계로 보면 급증일이었던 지난 11일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나타나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3.0%포인트 하락한 41.4%(매우 잘함 25.9%, 잘함은 편 15.5%)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